

식품범죄에 얽혀진 법원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 옛말...광주지법 실형 선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이후 육류 등 식품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원도 이들 사범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최근까지 농·축산물의 원산지 조작과 불법 유통 사례가 많이 적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검찰의 약식기소나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 상반기(1~6월) 광주지방법원의 최고급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3건 가운데 1건만이 집행유예였고, 나머지 12건은 50만~5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실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올해 이뤄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13건 중 4건만이 정식기소된 사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검찰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의자들이 벌금이 많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범 10명 중 7명은 정식기소되지 않고, 검사의 청구로 약식결정을 통해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이 감액된 사건도 4건이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의 절반 가량을 감액받았다.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의 양이 많았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그쳤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원산지

허위,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업체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9일 처음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업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미국산 등 수입 고기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양이 많고 기간도 길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이번 실형선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 시국의 흐름을 잘 반영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미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팔다 적발된 유명 음식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요구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건의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이 이뤄졌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은 징역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두 벌금형에 그친 것"이라며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있는 만큼 벌금도 앞으로 이들 업자들에게 대한 엄벌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산강 살리기 자전거 탐사

영산강살리기 대탐사 참가자들이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덕동 광주천 정검다리를 자전거를 들고 건너고 있다. 탐사팀은 이날 영산강과 광주천 일대에서 '영산강살리기 퍼포먼스 및 자전거 행진' 행사를 가졌다. /위정량기자 jrwi@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살리기 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2008년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참가자들이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덕동 광주천 정검다리를 자전거를 들고 건너고 있다. 탐사팀은 이날 영산강과 광주천 일대에서 '영산강살리기 퍼포먼스 및 자전거 행진' 행사를 가졌다. /위정량기자 jrwi@

시위 진압 '경찰 기동대' 1개 중대 광주 배치

'백골단 부활' 우려 여론

정식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 1개 중대가 광주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이들은 그동안 전·경들이 주로 맡아 온 시위 진압 등 일선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경찰관 기동대가 과거 80년대 사복 체포조인 속칭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청은 30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기동본부에서 '경찰관 기동대' 창설식을 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집회·시위 등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는 광주경찰청 1개 중대를 비롯한 서울·경기 등 광역시 단위 지방경찰청 17개 부대 1천700여명의 규모다.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찰관 기동대는 경정이 대장을 맡고 올해 초 신규 채용된 순경 69명과 경비부서에서 차

출된 경장급 이상 51명 등 120명으로 구성됐다. 신규 채용된 순경은 무술 유단자 등으로, 2년 동안 기동대 조건부 근무 한 뒤 일선 경찰서 등지에 순환 배치된다.

광주경찰청을 비롯한 기동대 조건부 인력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은 전국적으로 990명이다. 전남경찰청 기동대는 내년에 창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지역 쇠고기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허달용 집행위원장은 "전·의경 보다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경찰관 기동대'는 정권의 충실한 보디การ์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에만 1천400명의 경찰관 기동대원을 선발하고 대신 4천300명의 전·의경을 줄일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과도한 검문' 불교계 뿔났다

조계종, 경찰청장 사퇴 촉구

불교계 수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탄 차량을 경찰이 과도하게 검문하는 '결례'를 빚어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은 30일 관계자 문책과 함께 어청수 경찰청장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께 서울 견지동 조계사 입구에서 지관 스님이 외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나가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으며, 총무원장 신본이 확인된 뒤에도 차량 트렁크를 뒤지는 등의 검문이 이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지관 스님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보여주자 한 경찰관이 '그렇다면 더 철저히 검색해야

했다'며 트렁크를 열게 하고 검문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조계종 직원 70여명이 이날 오후 5시50분께 관할 중로경찰서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으며, 우문수 중로경찰서장이 총무원을 찾아와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조계사 근처에서 호법부장을 만나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승원 스님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을 범죄자 취급한 이번 사건은 국민과 불교계를 바라보는 경찰의 인식이 표출된 것"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분신할테면 해라" 라이터 준 30대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옛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위협유를 끼었고 협박하는 '정적(情敵)'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 전제로 라

이터를 던졌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 25일 새벽 3시 35분께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 B(26)씨가 위협유를 끼었고 찾아와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그럼 그냥 죽으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던져줬다. B씨는 몸에 불을 당겨 심한 화상을 입은 뒤 그 해 12월 12일 사망했다. /연합뉴스

여수 올 첫 적조주의보 발령

양식장 관리 비상

여수 앞바다에 올해 들어 첫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0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여수시 가막만 하단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해역에는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에 적조주의보 기준치(㎖당 300개체)를 초과한 ㎖당 최고 500

개체가 발견됐다.

수산과학원은 이번 유해성 적조는 지난 해 보다 하루 빨리 출현했으며, 적조발생 주변해역에 일사량이 증가하고 유해성 적조생물이 성장하기 좋은 수온 23.2~24.8도를 유지하고 있어 확산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적조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방

제단을 편성, 적조생물이 양식장 인근에 접근할 경우 방제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과장은 "적조 발생해역 주변 양식어민들은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가두리양식장 이동, 먹이공급 중단, 취수중단, 산소발생기 가동 등 적조피해 예방요령에 따라 양식장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보이스피싱' 4명 영장

목포경찰은 30일 우체국 직배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중국인 이모(2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주택에서 우체국 직배원을 사칭, 신용카드 발급과 개인정보 유출을 빚자해 피해자들을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계좌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박모(60)씨 등 3명으로부터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나원침 (7570) 김종두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력 및 상담관행

범행 현장서 '암묵적 동의' 댄 공범

○범원이 범행을 함께 모의한 사실이 없더라도 범행 현장에서의 '암묵적 동의'만 인정되면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광주지법 형사2 단독 최영남 판사는 30일 고용주를 도와 아파트 건설현장의 자재를 화물차에 실어 출차하려 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구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모의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최 판사는 "인적이 드문 밤 11시 공사현장에 단 두 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상한 물건을 실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지만 고용주가 '괜찮다'고 대답해 계속 자재를 실은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 /최권일기자 cki@

Large advertisement for 'Seegi Bocheonggi' (Worldwide Insurance) with a cityscape background and a large graphic of a person's head.